

#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 재영

2013. 12. 13

## I. 물환경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 발제문의 중요기반은 물통합관리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법의 개수가 많아진 것은 물 이용이 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다만, 법제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통일해서 일관성있는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은 일거에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체계에서 분야별 또는 주제별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  
물통합관리라는 대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에 맞도록 개별법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3. 각종 물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구추정은 늘 큰 문제로 되어왔다. 특히 수도권정책(수자원개발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인구추정이고, 또한 물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획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용수량의 추정이 이루어지는데, 인구추정도 물 사용량의 추정도 모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하기 어려운 근거를 바탕으로 수자원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내어놓아도 일반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본다.  
댐 장기기본계획도 이러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하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4. 하천의 기준유량도 발제문에서 지적된 대로 각 계획별로 기준유량이 다르고, 현실성 없는 기준유량이 설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천기준유량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전국 물통합관리계획 및 유역별 물통합관리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에서 검토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관련계획간의 문제점에서 치수부문, 이수부문 및 하천환경부문을 부문별로 별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치수와 이수 및 하천환경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하천환경계획(가령,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제시된 각종 환경계획이 치수 및 이수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치수 및 이수계획을 반영하여 하천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비로소 종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관리의 기본개념에 충실하도록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과정에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유역별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 거버넌스는 자문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역의 관리는 해당 유역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따라서 유역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역문제를 자결(自決)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유역민주주의 또는 하천민주주의이다. 물관리는 유역의 하위개념으로서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물 통합관리의 선진사례로서 충청남도를 들고 있는데, 선진사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물통합관리는 실무적으로 환경녹지국 산하 팀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틀에서의 물통합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에 예속되지 않는 형태로 독립적으로 최소한 과 단위의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설문조사결과에서 하천관련계획들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이것은 계획이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복된 계획이 많은데 이것

이 통합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8. 개선방안중에서 치수부문의 통합방안으로서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을 제시하고 있는데, 명칭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계획에서는 치수 뿐만이 아니라 이수계획 즉, 물 공급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가 중요한데, 치수 계획을 수자원계획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상수도 정책방향

1. 성장 패러다임에서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절실한 시대적인 요구이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거쳐 진정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부 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만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인 동의 또는 사회적인 수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지속가능발전 개념에서는 2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고 경제의 작동방식을 사회 가치의 범위내로 통제하고 이들이 환경의 기반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경제성장, 환경보존, 사회통합의 세 축이 비록 그 상호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 요소의 교집합이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쉽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친 후, 발전문에서 제시된 두 번째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광역상수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1) 수원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

수원의 일원화로 인한 수원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 즉, 수원이 다양화되어 있으면 재해 및 수질사고 등의 경우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미치지만, 수원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광역에 미치게 되는 점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 2) 광역상수도의 효율성의 문제

광역상수도의 시설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낮은 가동율(2010년 현재 67%)과 이로 인한 시설비용의 수도요금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3) 광역상수도의 확장에 따른 수원의 추가확보의 문제

충남의 경우, 충남 전체(서산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원확보가 필요할 것인데, 댐의 추가건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원의 추가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의 추가확보를 현재의 댐에 의하지 않게 되면, 결국 수자원의 다양화로 연결되고 광역상수도의 효율성은 사라지게 된다.

#### 4) 요금상승에 대한 저항

간이상수도 지역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요금상승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5) 상수도 자립의 문제

하나의 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공급을 독점할 경우의 충남의 상수도 정책은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수도민영화정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상수도 요금은 독점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